

정부의 재정정책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기원이론에 따른 국가별 패널분석*

김석은**

김유현***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비영리부문의 중요한 재원인 기부와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30개 OECD 국가에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499개 불균형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총 세수의 증가가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해 부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사회복지지출규모 증가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비영리부문의 성장요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와 비영리부문의 관계가 국가유형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기존의 정부실패이론이나 상호의존이론 보다는 사회기원이론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요인에 대한 보다 근거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비영리부문성장, 사회기원이론, 정부재정정책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8014278)

**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영리조직관리, 사회적 책임성, 환경디자인과 조직행태 등이다 (seokeun@hanyang.ac.kr).

***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영리경제학, 재정과 조세, 사회적 경제 등이다 (sergay23@hanmail.net).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정책이나 사회복지지출과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비영리부문의 중요한 재원인 기부와 사회복지지출의 크기를 결정하며 이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율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정부의 조세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Hodgkinson and Weitzman, 2001).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 또한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사회복지 재원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점점 이 재원을 민간에 이전하여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Foster and Fine(2007)에 의하면 1970년 이후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영리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밝혔다. Salamon and Anheier (1998) 역시 정부가 비영리부문에 상당한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비영리부문의 가장 중요한 기부자(Philanthropist)라고까지 칭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사회복지지출과 같은 재정정책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보고 이러한 관계를 장기간의 국가별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하고자 한다. 비영리부문의 성장요인을 밝히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미국이나 몇몇 서구 국가들에서 한 국가내의 횡단면 분석을 하거나 또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시계열 분석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Crobin, 1999; Grønberg and Paarlberg, 2001; Lecy and Van Slyke, 2013; Saxton and Benson, 2005). 국내에서도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대한 몇몇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시민사회와 정부의 제도적 관계를 서술하거나 비영리부문의 성장과정을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구혜영, 2012; 김준기, 2006; 김태룡·권해수·정정화·안희정, 2011; 임승빈, 2012; 정병걸·성지은, 2002; Choi and Yang, 2011; Kim and Hwang, 2002).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미국 내에서 주(states) 또는 시·군 단위 자료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국가 간 패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단기기간의 국가 간 패널분석을 시도한 기존 연구들이 정부실패이론과 상호의존이론의 검증을 통해 정부와 비영리부문의 관계를 설명하려했던 것과 달리, 사회기원이론(social origins theory)을 바탕으로 국가의 유형을 분류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국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 유형별 패널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은 비영리부문이라고 하는 특정 제도영역의 확대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경제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가 가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회기원이론에 근거한다.

이 가정의 검증을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정부의 재정정책과 비영리부문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국가별 비영리부문의 유형을 구분한 것과 구분하지 않은 두 가지 회귀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며, 결론에서는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

II. 이론적 논의

1. 비영리부문 성장에 관한 이론적 배경

비영리부문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의 이질적인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공공재이론 또는 정부실패이론(Weisbrod, 1977, 1988), 이질성이론(James, 1987), 시장 또는 계약실패이론(Hansmann, 1980) 등으로 정리되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비영리부문은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 결속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산업사회에서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승현, 2008). 따라서 비영리부문은 개인들의 사회적 소외를 막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촉매가 된다. 한편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비영리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교류와 관계에 의해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그러한 신뢰와 협력적 관계가 사회전반에 걸쳐 일반화됨으로써 정치적 발전, 경제성장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Coleman, 1990; Putnam, 1995).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비영리부문의 긍정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세금공제, 보조금 지급, 우편요금 할인, 공영방송에서의 무상 광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비영리부문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실패이론(Government failure theory)에서는 정부의 규모와 비영리부문의 성장은 역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반면,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에서는 정부 규모의 확대가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실증분석을 포함한 연

구결과들에 있어서도 Salamon, Sokolowski, and Anheier(2000)는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비영리부문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정부규모 확대가 비영리부문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Matsunaga, Yamauchi and Okuyama, 2012; Pevcin, 2012).

정부의 규모를 결정짓는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지출은 비영리부문 성장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율의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가 민간의 가치분소득을 위축함으로써 비영리조직에 대한 민간의 기부를 저해하기도 하지만,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은 민간의 기부를 촉진하여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ansmann(1987)은 미국의 각 주별 조세자료를 바탕으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비영리조직에 대한 재산세, 판매세, 법인세의 비과세 혜택이 해당 산업에서 비영리조직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비영리부문의 규모와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isbrod, 1988).

이와 같이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 최종적인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지출 및 총 세수 증가와 같은 정부규모의 확대가 비영리부문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부와 비영리부문의 관계가 대립적인지, 상호의존적인지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현물(In Kind)지출과 현금(Cash)지출로 구분하여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과 같은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로 인해 비영리부문의 활성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율에 대한 의사결정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3의 영역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기원이론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정부정책들이 갖는 효과성 역시 해당 국가의 시·공간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볼 것이다.

2. 사회기원이론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의 변화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정 국가에

서 강하게 발생하는 경로가 다른 나라에서는 약하게 나타나거나 아예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제도적 환경과 국민들의 인식수준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의 역사적 발전과 그로 인해 형성된 국민들의 인식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시장과 정부, 비영리부문 중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역시 시장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만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Salamon, et al.(2000)은 이와 같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기원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어느 부문에서 제공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해당 사회가 발전해온 역사적이고 공간적인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시·공간적 배경이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제도와 정책이 안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 역시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조직의 발전과 형성, 선택에 대한 결정이 복잡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 요인들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기원이론의 관점은 Barrington Moore, Jr.(1966)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연구(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와 Gøsta Esping-Anderson(1990)의 '근대 복지국가의 기원에 대한 연구(The Origins of the Modern Welfare State)'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와 같은 복잡한 사회현상은 산업화 또는 이질성과 같은 단편적인 원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보다 복잡한 사회계층과 조직의 상호작용이 수반된 결과라고 하였다(Salamon et al., 2000).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 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조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비영리부문은 복잡한 사회요소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어우러져 동화되어 있는 것이다(Siebel, 1990). 결국 사회기원이론 관점에서 비영리부문의 성장은 특정 요인에 의해 단편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의 역사적 발전 배경과 체제,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Esping-Anderson(1990)은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복지국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 첫 번째는 자유주의 체제(Liberality regime)로 주로 영미계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 유형은 강한 권리 규정에 따라 철저한 소득조사에 근거하여 제한된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기원은 절대왕정의 약화와 함께 부르주아들을 중심으로 한 무간섭주의(Laissez-faire)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조합주의 체제(Corporatist regime)는 유럽대륙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유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동시에 종교단체와 같은 전근대적 조직들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강한 귀족주의와 종교단체의 권력, 강한 정부의 역할이 어우러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체제(Social democratic regime)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등장한 것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노동운동과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보편적 복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

국가 유형분류와 관련한 Esping-Anderson(1990)의 연구와 이후 발전된 사회기원이론을 바탕으로 Salamon et al.(2000)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존스홉킨스 비교연구 프로젝트(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이하 CNP)를 통해 표준화된 실증분석을 위해 비영리부문 성장과 관련한 국가유형을 비영리부문 규모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두 축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자유주의 모형(Liberal model)은 비영리부문의 규모는 크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작은 국가유형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정치 사상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 기존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등장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민주주의 모형(Social democratic model)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큰 반면 비영리부문의 규모는 작다. 여기서는 사회보장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부문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비록 비영리부문 규모가 낮은 수준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든 영역의 비영리부문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어도 정치, 사회, 문화적 표출을 대변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비영리부문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국가들은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세 번째 조합주의 모형(Corporatist model)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도 크고 동시에 비영리부문의 규모도 크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유형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정부가 비영리부문의 활동을 조장하여 주요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복지 수요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제주의 모형(Statist model)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비영리부문 규모가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국가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모형에서 노동자 계층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우위권을 점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나약한 종교적 신념과 오랜 세월 복종해온 관성이 남아 있어 사회복지정책이 부족하더라도 자유주의 유형에서와 같이 자발적인 비영리부문 활성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Salamon et al.(2000)은 22개 국가에 대한 1995년도 횡단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영리부문의 유형 분류를 실시하였다.¹⁾ 비영리부문 규모를 전체 비농업 종사자 수 대비 비영리부문 종사자 수 비중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각 변수를 특정 국가의 실제 관측 값과 전체 국가 평균과의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눈 표준화 z-점수를 계산하여 그것들을 사분면에 표시한 후 각 비영리부문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별 유형을 나눈 함의는 비영리부문의 규모와 성장을 설명하는 어느 한 가지 이론은 있을 수 없으며, 각 나라의 다양한 정치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비영리부문 성장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데 있다.

3. 정부의 재정정책과 비영리부문 성장의 관계

재정정책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민간의 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소득세율, 법인소득세율, 총세수, 현물과 현금사회복지지출의 다섯 가지 재정정책 수단과 비영리부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소득세율은 기부금의 규모에 변화를 주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실패이론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제약을 갖는 정부의 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자발적 기부금은 비

1) Salamon et al.(2000)이 나눈 유형별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부문 규모	사회복지지출 규모	
	작음	큼
높음	Liberal 미국, 아일랜드, 호주	Corporatist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낮음	Statist 일본, 멕시코, 루마니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Social Democratic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핀란드, 슬로바키아

영리부문의 서비스 공급 재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alamon et al., 2004). 실제로 미국 IRS code 501(c)(3)으로 등록된 공공자선단체의 수입원을 보면 서비스 수수료가 70.9%, 민간의 기부금이 12.5%, 정부지원 9.0%, 투자수입 3.9%, 기타수입 3.7%로 서비스 수수료 수입을 제외할 경우 민간 기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Young and Steinberg, 1995). 개인소득세율의 상승은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기부금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율의 상승은 소득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기부의 실질가격을 하락시켜 기부행위를 촉진시키는 대체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소득세율의 변화가 갖는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한 효과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둘째, 법인소득세율의 상승은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공급하며 경쟁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법인 소득세율의 상승이 비영리법인의 상대적 비과세 혜택의 크기를 증가시켜 경쟁적 이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때 영리법인이 법인소득세율 상승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이는 비영리부문 규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요양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등의 경우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이 혼재하여 경쟁하고 있다(Young and Steinberg, 1995).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 사업과 무관한 영리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이익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인소득세율의 상승은 비영리부문의 서비스 공급 재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Young and Salamon, 2002). 따라서 법인소득세율의 상승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가지며, 각 효과의 크기에 따라 비영리부문 성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조세수입은 정부지출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소득이 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세수의 증가는 민간의 소비재원을 구축(crowd out)하는 대신 정부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총 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대해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만약 정부가 증가된 세수 중 일부를 비영리부문에 대한 보조금 확대 또는 비영리부문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충당한다면 이는 비영리부문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한 총 세수의 효과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현물 또는 현금지출은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기부금과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기부금을 구축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Weisbrod(1988)는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가 민간의 기부금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가 특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해당 분야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민간의 기부금 형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 Abrams and Schmitz(1978)는 정부의 사회서비스지출이 민간의 기부금을 구축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Schiff(1984)는 사회서비스 유형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계지원에 있어서는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건강, 주택 등 다른 사회서비스에서는 정부의 지출이 민간의 기부금 형성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비영리부문의 사업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분야와 대체성을 갖는지, 또는 상호보완성을 갖는지에 따라 민간의 기부금을 구축할 수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현금지출이 현물지출보다 민간의 기부금 형성을 구축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서비스 공백이 완화된다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부문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그것이 제공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민간의 기부금을 구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II. 데이터와 분석방법

1. 데이터

비영리부문의 규모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는 GDP대비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NPISH)의 최종소비지출규모(final consumption expenditure)를 사용하였다(UN Statistic Division, 2013). NPISH의 최종소비지출 규모는 UN에서 개별국가들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소득계정 작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가능한 패널자료로 구성할 수 있었다. NPISH의 최종소비지출 규모는 주로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의 분야에서 NPISH가 가계에 무상(또는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서비스에 투입된 운영비용의 총합계, 즉 총산출에서 가계에 서비스를 판매한 매출액을 차감한 나머지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비영리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간 100만원의 총지출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가계와 의료보험기관이 직접 지출한 금액이 포함될

것이다. 만약 이 금액이 60이라면 이것은 비영리의료기관이 판매한 매출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40이 NPISH의 최종소비지출규모로 집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선택한 종속변수는 비영리부문 규모를 과소 측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부문의 실질적인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한 활동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더욱이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비영리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한 설명변수로서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 총 세수 그리고 사회복지 현물지출과 현금지출 총 다섯개를 고려하였다²⁾. 이들 다섯 가지 정부의 재정정책은 비영리부문의 중요한 재원인 기부와 사회복지지출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은 각각 국가별 최고 세율을 활용하였고, 총 세수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비중으로 변환하여 경제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현물(In-Kind)과 현금(Cash)이 갖는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두 개의 변수로 나누어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효용이 큰 방식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정책목적 달성에 더 유용한 방식은 현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김태완·김문길·윤상용·송치호·김성아·이주미, 2013). 종속변수를 포함한 각 변수들의 정의와 출처 및 요약 통계치는 각각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각 변수의 정의 및 출처

변수	정의	출처
비영리부문규모	GDP 대비 NPISH의 최종소비지출 규모	UN, Statistics Division
개인소득세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OECD, Tax Database
법인소득세율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OECD, Tax Database
총 세수	GDP 대비 총 세수 비중	OECD, Revenue Statistics

2) 모형설정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작을 경우 추정량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커도 효율성(Efficiency)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가 모든 설명요인을 포괄하지 않아 편의를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론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모형을 설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설명변수들을 포함해 관측점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핵심적인 재정정책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명변수 군을 형성하였다.

사회복지현물지출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복지 현물지출 비중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사회복지현금지출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복지 현금지출 비중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인당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의 자연로그 값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여성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 여성인구 비중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 비중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노인인구비중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총인구수	총인구수의 자연로그 값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도시인구비중	총인구 대비 도시인구 비중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료는 총 30개의 OECD 국가³⁾에 대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개년도, 총 499개 관측점을 갖는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로 구성하였다. 관측점의 수는 슬로베니아가 3개년도로 가장 적었으며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미국이 21개년도로 가장 많았다. 종속변수인 GDP 대비 NPISH의 최종소비지출 규모는 0.3%에서 3.3%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은 1.4%이다. 종속변수의 최소값을 가진 나라는 이탈리아였으며, 최대값을 보유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평균은 각각 45.8%와 32.9%였고, 총 세수의 경우 적게는 17.1%에서 많게는 52.3%에 달했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현물지출은 평균 7.8%이고, 현금지출은 평균 12.2%인 것으로 나타나 현금지출이 조금 더 높았다. 그러나 최소값을 보면 현물지출이 1.5%인 반면 현금지출은 1.2%인 것으로 조사되어 각 나라별로 반드시 현물지출이 현금지출보다 높다고 볼 수만은 없었다. 다만 30개 대상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났으며, 현물지출의 최대값은 스웨덴이, 현금지출의 최대값은 오스트리아가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분석의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표 3〉 요약 통계치

변수명	관측점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비영리부문규모	499	0.0139	0.0055	0.0032	0.0325
개인소득세율	499	0.4584	0.0921	0.1500	0.7020
법인소득세율	499	0.3285	0.0840	0.1250	0.5820
총 세수	499	0.3560	0.0752	0.1710	0.5226
사회복지현물지출	499	0.0783	0.0242	0.0148	0.1498
사회복지현금지출	499	0.1216	0.0406	0.0115	0.1932
ln(1인당국민소득)	499	10.1806	0.5985	8.3596	11.1490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9	0.5238	0.0942	0.3390	0.8190
실업률	499	0.0686	0.0350	0.0150	0.2060
노인인구비중	499	0.1438	0.0298	0.0498	0.2296
ln(총인구수)	499	16.5275	1.5011	12.5468	19.5499
도시인구비중	499	0.7543	0.1058	0.4792	0.9742

2. 분석방법

실증분석은 두 단계로 시행되었다. 먼저 국가별 비영리부문 유형 분류를 적용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은 국가별 특이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F-통계량은 216.45로 99% 유의수준에서 국가별 특수성이 무의미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패널분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만약 관측되지 않은 특이성이 국가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형성되어 다른 설명변수들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58.55으로 99%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였다.⁵⁾

다음으로 Salamon et al.(2000)처럼 30개 국가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유형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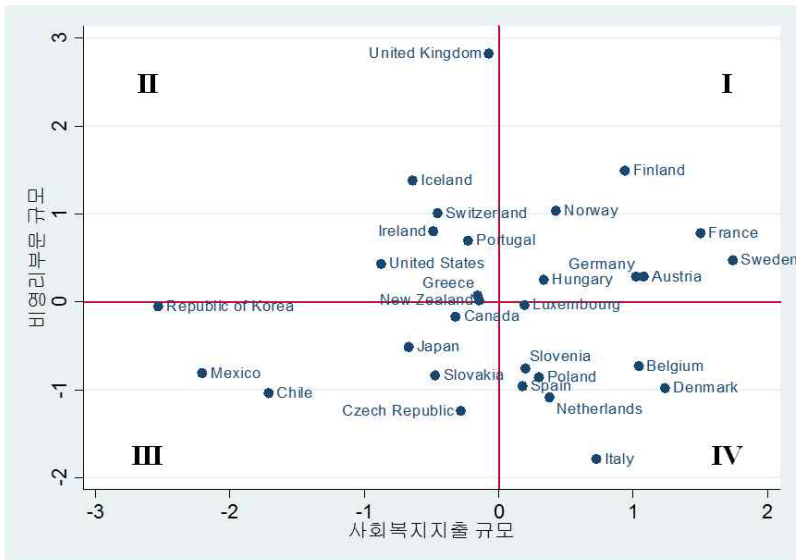
- 고정효과모형이 언제나 일치추정량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계산과정에서 손실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없다면 모든 정보를 손실 없이 활용하는 랜덤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제공한다(Greene, 2008).
- 각 국가유형별 모형에서의 F값과 하우스만 검정 결과 역시 모두 99%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이 채택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유형	조합주의	자유주의	통제주의	사회민주주의
F-통계량	35.73	104.67	43.87	7.25
하우스만 검정	74.06	111.31	72.08	36.67

시도하였다. 우선 GDP대비 NPISH의 최종소비지출 규모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각각에 대한 표준화 z-점수를 계산하여 비영리부문 유형을 분류하였다. 다만 1995년도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한 Salamon et al.(2000)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30 개 국가들에 대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개년도의 국가별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표준화 z-점수를 구해 이를 비교, 분류하였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면 비영리부문 규모와 사회복지지출규모가 모두 크게 나타나고 있는 1사분면이 조합주의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국가들을 놓고 보았을 때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가 여기에 해당된다.⁶⁾ 2사분면은 비영리부문의 규모는 크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유주의 모델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해당된다. 3사분면은 통제주의 모델로 비영리부문과 사회복지지출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는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과

<그림 1> 사회기원이론에 따른 국가별 유형 분류



6)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조합주의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소 의아할 수 있으나, NPISH의 최종소비지출 규모가 서비스 수수료 부분을 배제한 개념임을 감안할 때 해당 국가들의 NPISH가 서비스 수수료 수입보다는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큰 분야에서 더 크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나라들이 속해 있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사회복지지출은 큰 반면 상대적으로 비영리부문의 규모가 작은 국가 유형이다. 여기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속해 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비영리서비스 기관보다는 시민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으나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부문 역시 발달되어 있다(김승현, 2008; Salamon et al.,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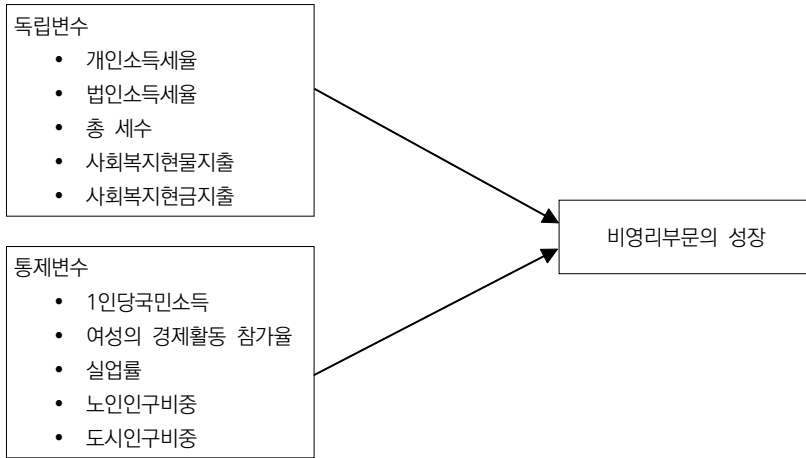
첫 번째 실증분석 단계에서는 국가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면, 두 번째 실증분석 단계에서는 더미변수 생성에 사용된 사회복지지출이 독립변수로 이중 사용됨을 방지하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패널분석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국가유형에 따른 표본을 별도로 생성하여 국가유형별 4개의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은 정부가 활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이 비록 경제적 목적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비영리부문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자 조세수단과 복지지출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였다. 아래 <표 4>는 주요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비록 총 세수와 현물과 현금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두 사회복지지출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VIF값이 최대 5.9, 평균 2.9로 모두 10미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Wooldridge, 2013).

〈표 4〉 주요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개인소득세율	1				
법인소득세율	0.4166*	1			
총 세수	0.4501*	-0.0038	1		
사회복지현물지출	0.3325*	-0.0701	0.7338*	1	
사회복지현금지출	0.3347*	0.1062*	0.7425*	0.4576*	1

이와 더불어 주요 독립변수들과 비영리부문의 규모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비영리부문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섯 가지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65세 이상 인구비중, 총인구수, 도시인구비중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영리부문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 제시되었다(김석은·김유현, 2013; Grønberg and Paarlberg, 2001; Kim and Kim, 2015; Saxton and Benson, 2005). 다음 <그림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분석틀과 분석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2〉 분석틀과 분석모형



$$NP_{it} = c + \alpha_i + BX_{it} + \Gamma C_{it}$$

$$B = [\beta_1 \beta_2 \beta_3 \beta_4 \beta_5], \quad X_{it} = \begin{bmatrix} \text{개인소득세율} \\ \text{법인소득세율} \\ \text{총세수} \\ \text{사회복지현물지출} \\ \text{사회복지현금지출} \end{bmatrix}_{it}$$

$$\Gamma = [\gamma_1 \gamma_2 \gamma_3 \gamma_4 \gamma_5 \gamma_6], \quad C_{it} = \begin{bmatrix} \ln(1인당국민소득) \\ \text{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text{실업률} \\ \text{65세이상인구비중} \\ \ln(\text{총인구수}) \\ \text{도시인구비중} \end{bmatrix}_{it}$$

IV. 분석 결과

실증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모형에 대해서 F값이 관측되지 않은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하우스만 검정치 역시 랜덤 효과분석이 일치추정량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언제나 일치추정량을 제공하

는 고정효과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비영리부문의 규모가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복지지출 등 재정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기본가정과 일치하였다.

먼저 국가별 비영리부문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국가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에서는 법인소득세율이 1% 증가할 경우 비영리부문의 최종소비지출 규모 비중은 0.0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소득세율 인상이 영리조직에 대한 비영리조직의 경쟁적 우위를 가져와 비영리조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을 증가시켰을 수 있으며, 법인소득세율의 증가가 갖는 기부금에 대한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커 영리조직의 기부금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총 세수의 증가는 비영리부문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정책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총 세수가 1% 증가할 때 비영리부문의 최종소비지출 규모는 약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세수 증가로 인한 정부규모의 확대가 민간의 기부금 재원인 가치분소득의 감소를 일으키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량을 늘려 비영리부문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정부실패이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결과다.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는 현금성일 경우 비영리부문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현금지출이 1% 증가할 때 비영리부문의 최종소비지출 규모는 0.02%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사회복지현금지출 확대가 이루어질 때 그 중 일부는 비영리부문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물지출인 경우엔 전반적으로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제주의 국가에선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몇몇 국가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국가별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조세수입의 증가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미미하게나마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실패이론이나 상호의존이론 중 어느 한 이론으로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파악할 수 없었다.

〈표 5〉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한 패널 분석

변수	전체국가	I 조합주의	II 자유주의	III 통제주의	IV 사회민주주의
개인소득세율	-0.00107 (0.00157)	0.00299 (0.00260) 1215	0.00756 (0.00613)	0.00402** (0.00197)	0.00036 (0.00365)
법인소득세율	0.00596*** (0.00180)	0.00894*** (0.00204)	0.01589*** (0.00579)	-0.00909*** (0.00290)	-0.00201 (0.00379)
총 세수	-0.03397*** (0.00376)	-0.01659** (0.00777)	-0.03551*** (0.00887)	-0.02133*** (0.00409)	0.00119 (0.00644)
사회복지 현물지출	0.00996 (0.01120)	-0.01104 (0.02138)	0.01176 (0.03019)	0.02927* (0.01649)	-0.05459*** (0.01737)
사회복지 현금지출	0.02213*** (0.00652)	0.07555*** (0.01681)	-0.00804 (0.02453)	-0.00994 (0.01116)	0.02959** (0.01393)
1인당 국민소득	-0.00121 (0.00082)	-0.00070 (0.00166)	-0.00586** (0.00290)	-0.00230** (0.00093)	0.00309* (0.00185)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0.00633 (0.00406)	-0.04933*** (0.00830)	-0.00048 (0.01576)	-0.00827 (0.00861)	0.00849 (0.00735)
실업률	0.00186 (0.00377)	-0.02495*** (0.00774)	-0.00195 (0.01845)	-0.00231 (0.00433)	0.01146*** (0.00412)
총인구수	0.01994*** (0.00286)	0.04044*** (0.01059)	0.01651** (0.00659)	0.00800** (0.00392)	0.01162* (0.00686)
노인인구비중	0.02783*** (0.00861)	0.09338*** (0.01303)	0.07744** (0.03354)	0.02922* (0.01493)	0.01826 (0.02364)
도시인구비중	0.00220 (0.00442)	-0.01848* (0.01106)	0.06909*** (0.01331)	-0.01115 (0.00700)	0.03671*** (0.01187)
상수	-0.29858*** (0.04387)	-0.62614*** (0.17024)	-0.24922*** (0.09432)	-0.08941 (0.06088)	-0.24655** (0.09614)
관측점	499	122	142	109	126
R-squared	0.37412	0.63417	0.58306	0.70353	0.57137
분석국가수	30	7	8	7	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국가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사분면과 III사분면에 해당되는 조합주의(corporatist) 국가와 통제주의(statist)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비영리부문 성장간의 관계에 있어 정부실패이론과 상호의존이론이 함께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총 세수의 증가는 비영리부문의 규모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현금지출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사분면에 해당되는 자유주의(liberal) 국가의 경우엔 정부실패이론이 더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 국가 유형에 가까울수록 조세수입 증대를 통한 정부의 역할 확대는 민간의 가치분 소득을 줄여 기부의 의지를 저하시킴으로써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사분면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국가의 경우엔 예측과는 달리 어떤 이론으로도 명확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현물지출의 경우엔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사회복지현금지출의 경우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계약금의 이전을 통한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유형에서 발견되는 결과는 자유주의 국가유형에 가까울수록 정부의 역할 확대를 경계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사회문제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국가의 복지제도를 선호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유형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한다.

한편 법인세율은 대체로 비영리부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영리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주의와 자유주의 국가유형에 가까울수록 법인세율의 인상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율의 상승이 세제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비영리부문으로의 기부금 제공의 이득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영리부문이 잘 발달된 나라일수록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지금까지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외국의 연구에서도 국가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패널분석 연구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비록 종속변수가 한 나라의 비영리부문 규모 자체를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해도 비영리부문 규모에 관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21년간의 국민계

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3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들이 정부와 비영리부문의 관계에 있어 정부실패이론과 상호의존이론을 검증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지었으나 그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비영리부문의 관계에 있어 사회기원이론에 근거하여 국가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비영리부문의 성장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총 30개 OECD 국가의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패널분석결과 선행 연구결과들처럼 정부와 비영리부문의 관계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려대상 변수가 총 세수, 사회복지지출인지에 따라 정부와 비영리부문이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또한 상호의존적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총 세수 증가를 통한 정부규모의 확대가 보조금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민간의 기부금과 비영리부문 활동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정부실패이론),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은 주로 비영리부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민간의 기부금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상호의존이론). 결국 정부실패이론도 상호의존이론도 비영리부문의 성장요인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가간 데이터에서 비영리부문의 성장 원인에 대한 일관된 이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기원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회에서 조직이 생성, 발전하는 것은 단순한 몇 가지 정책적 요인만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정치, 사회, 문화, 제도의 역사적 과정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alamon et al.(2000)의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별 비영리부문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재정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소득세율의 상승은 통제주의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모델의 국가들에서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소득세율은 조합주의와 자유주의 모델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통제주의 모델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 세수의 확대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전반적으로 현금성 지출에서 비영리부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세율, 세수, 사회복지지출과 같은 재정정책의 변화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효과의 크기는 국가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비영리부문 성장과 관련하여 어느 하나의 특정 모델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기원이론에서는 특정 조직과 부문이 생성·발전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진 시·공간적 배경에 귀속되는 오랜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김승현, 2008). 다만, 한 사회가 특정 유형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영리부문의 역할과 규모가 자리 잡은 이상 정부정책의 변화는 유형에 따라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부문의 바람직한 성장모델을 설계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혜영. 2012. 《자원봉사론》. 서울: 신정출판사.
- 김석은·김유현. 2013. “경제사회적 환경이 비영리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시계열 회귀분석.” 《한국행정학보》 47(4): 287-311.
- 김승현. 2008.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51집.
- 김준기. 2006.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 김태완·김문길·윤상용·송치호·김성아·이주미. 2013.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15.
- 김태룡·권해수·정정화·안희정. 2011. 《현대사회와 NGO》. 서울: 대영문화사.
- 임승빈. 2012. 《정부와 NGO》. 서울: 대영문화사.
- 정병걸·성지은. 2002. “한국의 사회단체와 영향력: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5(3): 51-75.
- Abrams, B. A. & Schmitz, M. D. 1978.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al Transfers 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33:30-39
- Choi, S. O. & Yang, S. B. 2011. “Understanding Challenges and portunities in the Nonprofit Sector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6(1): 51-69.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rbin, J. J. 1999.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Growth of Nonprofits in Social Servic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3): 296-314.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oster, W. & Fine, G. 2007. "How Nonprofits Get Really Big."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46-55.
- Greene, W. H. 2008. *Econometric Analysis*. New Jersey: Prentice Hall.
- Grønbjerg, K. A. & Paarlberg, L. 2001. "Community Variations in the Size and Scope of the Nonprofit Sector: Theory and Preliminary Finding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4): 684-706.
- Hansmann, H. 1980.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The Yale Law Journal* 89(5): 835-901.
- _____. 1987. "The Effect of Tax Exemption and Other Factors on the Market Share of Nonprofits Versus For-profit Firms." *National Tax Journal* 40: 71-82.
- Hodgkinson V., & Weitzman, M. S. 2001. "Overview: The State of the Independent Sector." *the Nature of the Nonprofit Sector*, 9-22.
- James, Estelle. 1987. "The Nonprofit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W. W. Powell (eds).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pp. 397-415),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Kim, I. & Hwang, C.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South Korea." *Working Papers of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no.41. Baltimore: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2002.
- Kim, S. E. & Kim, Y. H. 2015. "Measuring the Growth of the Nonprofit Sector: A Longitudinal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2): 242-251.
- Lecy, J. D. & Van Slyke, D. M. 2013. "Nonprofit Sector Growth and Density:

- Testing Theories of Government Suppor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3(1): 189-214.
- Matsunaga, Y., Yamauchi, N., & Okuyama, N. 2012. “What Determines the Size of the Nonprofit Sector: A Cross-Country Analysis of the Government Failure Theory.”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1(2):180-201.
- Moore Jr, Barrington.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 Pevcin, P. 2012. “Analysis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the Nonprofit Sector Size.” *Prague Economic Papers* 2: 186-204.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Salamon, L. M. (ed.). 2002.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Washington, DC: Brookings.
- Salamon, L. M. & Anheier, H. K. 1998. “Social Origin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9(3): 213-48.
- Salamon, L. M., Sokolowski, S. W., & Anheier, H. K. 2000.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An Overview. *Working Papers of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No. 38. Baltimore: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 Salamon, L. M., Sokolowski, S. W., & Associates. 2004.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 Saxton, G. D. & Benson, M. A. 2005. “Social Capital and the Growth of the Nonprofit Sector.” *Social Science Quarterly* 86(1): 16-35.
- Schiff, J. 1984. *Government Output, Government Grants and Charitable Do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Tulane University.
- Siebel, W. 1990. “Government/Third Sector Relationship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ases of France and West Germany.”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 42-61.

- United Nations Statistic Division. 2013.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Retrieved from www.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sna.asp.
- Weisbrod, B. A. 1977. *The Voluntary Nonprofit Sector*. Lexington, KY: Lexington Books.
- _____. 1988. *The Nonprofit Econom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oldridge, J. M. 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5th.). South-Western.
- Young, D. R. & Steinberg, R. 1995. *Economics for Nonprofit Managers*. New York: Foundation Center.
- Young, D. R. & Salamon, L. M. 2002. "Commercialization, Social Ventures and For-Profit Competition." In L. M. Salamon (eds),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pp. 423-446). Washington, DC: Brookings.